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

광주·전남 대통합 선언... 특별법·협약체·통합단체장 등 합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5·18영령들 앞에서 양 시·도의 대통합을 위해 6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추진협약체를 설치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 참배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을 하나로 하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양 시·도가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 지방정부가 국가 행정권한 및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정구역 통합의 실무협의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장 '통합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남부지사와 광주시 부시장(정무)을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합의했다.

"지자체특별법 추진...행정·재정권한 이양 요구"
"의회·시민 설득 공동노력 통합안 최종 확정"
강기정·김영록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해야"

이어 "행정통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 시·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통합을 추진해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이룬다"고 명시했다.

이번 선언문은 광주와 전남지역이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시대,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아 양 시·도의 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하는 시·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어 광주·전남이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시·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에 과감한 재정·권한이양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전남에 AI·반도체·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인재 양성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인 만큼 부강한 광주·전남으로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 모델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에는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때 전까지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통합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는 공감대가 있어 통합단체장을 뽑는 걸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은 사실상 어느 지역보다도 한 가족, 한 뿌리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강 시장과 김영록이 결단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가능한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고 7월 1일부터는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가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민들께서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 광주·전남 대부흥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의원은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했고 특위가 당 차원에서 구성 돼 있다"며 "2월 말 법안을 처리하고 관련된 토론회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광주·전남 통합의 길 풀어야 할 과제도 '첩첩'

명칭, 청사 입지, 광주시 지위, 공직 통·폐합, 통합 시기 과제
TK 진통, 일본 실패 사례 등 타산지석... 풀뿌리 위축 우려도

40년 만의 대통합 선언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이 온전한 통합지방정부로 출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에 나선 것은 이번이 3번째. 올해는 5공 정권의 정치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논란 속에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한 뿌리'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되는 해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는 1995년, 2001년 전남도청 이전 문제와 맞물려 행정통합 논의가 두 차례 진행됐는데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TK) 통합, 충청연합 등 전국적으로 초광역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 통합 논의가 이어졌다.

인구 감소, 청년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몸집을 키우자", "합치지 않으면 도태된다"며 통합론이 화두였으나, 정치적 이해 관계와 복잡한 쟁점에 가로 막혀 이번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유수시대로 끝났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과격적 보증과 지원, 시·도 공감대로 어느 때보다 좋은 여건이 갖춰지긴 했으나 해결해야 할 쟁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통합지방정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지가 초기 관문이다. 명칭의 경우 역사성과 상징성, 조화성, 미래성을 두루 갖춰야 하고, 주민설문이나 주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청사 위치도 쟁점이다. 현 청사 두 곳을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청사를 만들 경우 지역이나 단체장 이기가 발동할 수 있다. 통합청사 위치 등의 문제로 통합추진단이 폐지된 대구·경북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광주시 지위 문제도 관건이다. '통합자치도' 형태로 합쳐질 경우 광주시

는 특별자치도 산하로 흡수돼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 통합 후 교부금 축소 등 후유증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市) 통합안이 예산 삭감과 복지 축소, 복지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주민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도 반경면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확한 컨셉과 의지, 강력한 협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분란과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구조조정에 따른 풀뿌리 자치 약화도 숙제다. 과소 지자체 폐지나 미니 지자체 통합과 맞물려 지방의회 의원수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10년 마산·창원·진주시(마창진) 통합 당시 의원 숫자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연합출범 과정에서도 연합의회 의원 배분을 놓고 시·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 시기를 두고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론'과 '속도조절론'이 맞서고 있다.

공공기관 통합해도 난제다. 당장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온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재통합을 비롯, 유사 기능과 이중예산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6500~7000명에 이르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간 통합도 녹록치 않는 과제다. 승진 적체, 직렬간 갈등, 근무지 이동 문제가 대두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지역민 의견수렴, 정치권과 시민사회,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가시밭길도 만만찮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2일 "통합은 시대적 과제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특히,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자주재정권 확대 등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1면에서 이어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수도권에 일부 부속기관을 남겨두고 있다. 수원시에 농식품유통교육원(33명), 서울 양재동에 aT센터에는 식품거점지원센터(30명)와 사이버거래소(57명)가 위치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당초 나주혁신도시 준공을 앞두고 계획했던 산하기관 이전이 중단된 만큼 정부의 2차 이전 정책에 발맞춰 잔여 기관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

다.

양 광역자치단체는 지난해 7월부터 시·도 연구원과 함께 비상설 전담 조직(TF)을 꾸려 운영하면서 30여개 공공기관 후보군을 도출했다.

광주는 AI·문화·사회서비스 분야를, 전남은 에너지·AI·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남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정관상 본점을 수도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관 개정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 이전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

법 일부개정안을, 문금주 의원은 농협중앙회 이전을 가능케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이번 '혁신도시 시즌2'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나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농생명·AI 융합 거점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윤병태 나주시장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전국혁신도시노

동조합협의회,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국회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 기관 재배치가 아닌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정책"이라며 "혁신도시가 조성 취지에 맞게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반드시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동취재부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광역시교육청